

태극기 사라진 광복절… “살 곳도 걸 곳도 없어요”

‘의무 아닌 선택’ 국기 게양률 저조
“집에 태극기 없어서 못 걸어” 42%
국기꽃이 없는 신축아파트도 늘어
“구청·행정복지센터 판매처 홍보를”

“요즘엔 태극기를 거의 안 달아요. 집에 태극기가 없기도 하고 걸 곳도 마땅치 않더라고요.”

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 국경일인 이날 대부분의 세대에는 태극기가 내걸리지 않았다. 20층이 훌쩍 넘어가는 아파트임에도 태극기는 고작 한 개만 걸려 있었다.

인근 다른 아파트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일반 가정집에서도 태극기를 쉽게 볼 수 있었던 예전의 국경일 풍경은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이처럼 국경일에 순국선열을 기리는 태극기 게양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어 역사 계승의 퇴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대부분의 시민이 태극기 판매처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르면 국기 게양일은 국경일인 삼일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과 기념일인 현충일(6월6일), 국군의 날(10월1일), 국가장일 등이다.

태극기 게양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은 해당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해



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오후 광주 동구 한 아파트. 수십 세대 중 한 세대에만 태극기가 게양돼 있다.

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주민 최진명(57)씨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경일만 되면 장롱 속에 보관해 뒀던 태극기를 꺼내 집 앞이나 아파트 베란다에 내거는 것을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태극기 게양을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년 전국 만 18

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기 게양 행태 및 태극기 이미지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5%는 ‘국경일이나 주요 기념일에는 집에 태극기를 걸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경일 및 주요 기념일에 태극기를 건다’고 답한 응답자는 47%로 절반도 되지 않았다.

광복절에 태극기를 걸지 않은 이유로는 ‘집에 태극기가 없어서’와 ‘집에 태극기를 걸 곳이 마땅치 않아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42%로 가장 많았다.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국기

꽃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점도 태극기가 걸린 곳을 찾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난간이 있는 경우 세대마다 국기봉을 뚫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21년 법 개정으로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으며, 난간이 없고 통창으로 된 신축 아파트가 점차 늘면서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는 세대가 많아졌다.

광주 서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김

경민(23)씨는 “집에 태극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며 “태극기를 달고 싶어도 집에 국기 꽃이가 따로 없다 보니 안 걸게 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시민이 태극기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다.

광주에서는 시청과 각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태극기를 판매하고 있으나 이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장효정(30)씨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마트에서 태극기를 산 기억이 있다”며 “요즘엔 판매하는 곳이 없길래 온라인으로 구매해야 하는 줄 알았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는 건 처음 들어봤다”고 당황했다.

윤길주(55)씨는 “광복절이라 태극기를 걸어볼까 생각하긴 했지만 자주 가는 마트에서는 안 팔고 있더라.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결국 포기했다”고 토로했다.

광주 공공기관들은 태극기 게양 문화 확산으로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원실 앞에 태극기를 판매한다는 안내문을 붙이는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다. 태극기 판매와 함께 훼손된 태극기 수거도 시청과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의 민원실에서 추진 중이다”며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정상아 기자

어머니 살해한 조현병 환자, 2심서도 징역 12년

치료감호·보호관찰 부과

어머니를 살해한 조현병 환자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감경이 인정됐으나 보호관찰을 받게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A(4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직권 파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하되 치료 감호와 5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전 순천시 자택에서 직계존속 관계에 있는 어머니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0여년 전 피해 망상 등 증상으로 조현병 진단을 받은 A씨는 약물 주입·입원 치료 등을 받아왔다.

당시 A씨는 어머니 B씨가 교회에 가라

고 강요하거나 냉장고에 오래 보관된 음식을 먹게 한다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한 중대 범죄인 점, 심신 미약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로 한다”며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죄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 만큼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기각은 원심의 판단이 수긍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죄책이 무거워 비난 가능성이 크고 출소 이후 자발적 치료를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며 “성인재범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평가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치료 감호 집행 이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광복절 폭주족 없었다… 범규 위반은 95건 적발

집중단속으로 사전차단 효과 범규 위반 광주 56건·전남 39건

광주·전남 경찰이 8·15 광복절 전후로 빈발하는 이륜차(오토바이) 난폭 운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범규 위반 사례 총 95건을 적발했다. 우려됐던 광복절 심야 시간 폭주 행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11시 이후 밤사이 이륜차 난폭운전 다발 장소 5곳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위법 사례 총

56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혐의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34건이 가장 많았으며, 미인증 등화(전조등 불법 개조 등)가 대다수인 자동차관리법 위반 적발 사례도 21건에 달했다.

나머지 1건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지명수배에 걸린 운전자로, 해당 기관에 통보 처분했다.

주요 국가기념일 전후로 출몰하는 이륜차 집단 폭주·교통방해 행위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도 밤사이 대대적인 주요 도심에서 벌인 결과 폭주행위는 없었으며, 총

39건의 일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4명 외에 범칙금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34건을 적발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1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에 의한 소음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긴 했으나 사전 단속으로 우려했던 폭주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尹, 일본 반성·책임 언급않아…최악”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비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역대 보지 못한 충격적인 광복절 경축사”라며 “일본의 반성과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일본이 결코 뒤러워 하는 표현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항일’이라는 표현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에서 저 자세 대일 굴종외교 기조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며 “선열들의 고귀한 투쟁과 희생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며 의미를 축소했고, 일본의 역사 도발에 대해서는 철저히 입을 닫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항일독립지사들에게 차마 낮을 들기 어려운 참담하고 부끄러운 광복절이다”고 비판했다.

윤준명 기자

오는 9월 12일까지

광주 시민 헌혈자 1만명을 목표로 하는 ‘31일간 사랑의 헌혈’ 릴레이가 지난 13일 시작됐다.

15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광주시청에서 ‘31일간 사랑의 헌혈’ 릴레이 시작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수 혈액원장, 최지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배복환 광주시 시민안전실장,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최기영 북구의회 의원을 비롯한 공무원과 시민, 적십자 봉사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헌혈 캠페인을 펼치고, 헌혈에도 직접 참여했다.

헌혈 릴레이는 다음 달 12일까지 관내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의 단체와 광주 시내 6개 헌혈의 집에서 시민들이



지난 13일 광주시청에서 김동수 광주·전남혈액원장과 최지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배복환 광주시 시민안전실장, 적십자 봉사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일간 사랑의 헌혈’ 릴레이 시작행사가 열렸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제공

참여해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수 광주·전남혈액원장은 “8월 13일 광주시민 헌혈의 날을 기념하고 혈액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31일간

사랑의 헌혈’ 릴레이 기간 동안 가족, 직장 동료, 친구와 함께 꼭 헌혈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헌혈 참여를 당부했다.

박찬 기자